? ? ?

0 누구의 역사가,
누구의 이익이,
누구의 미학 등이
존중 받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인간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지향하고 유지하려고 했던(하는) 사람들의 역사와 이익과 미학

0 인간적 상태란 무엇인가?
-구상과 실행의 분리에 반대하고 합치시키고 유지하는 상태
-행위(노동)와 행위(노동)결과의 분리에 반대하고 합치시키고 유지하는 상태

.....

미군정기에 노동자들은 전평을 결성했습니다.
전평을 결성한 목적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첫째는 '미군정을 철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첫째는 '인민의 나라'를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평은 9월총파업을 전개했고 이에 호응하여 일어난 것이 10월인민항쟁 등이었습니다.
즉, 전평 등 인민은 이러한 '대중투쟁'을 통하여 '미군정을 철폐'하고 '인민의 나라'를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2차세계대전 후 최초로 미국제국주의에 대항한 민족적·계급적 해방투쟁이라는 점에서 세계사적으로도 특기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관련했던 전평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의 배경, 전개의 특징, 성격, 패배원인 등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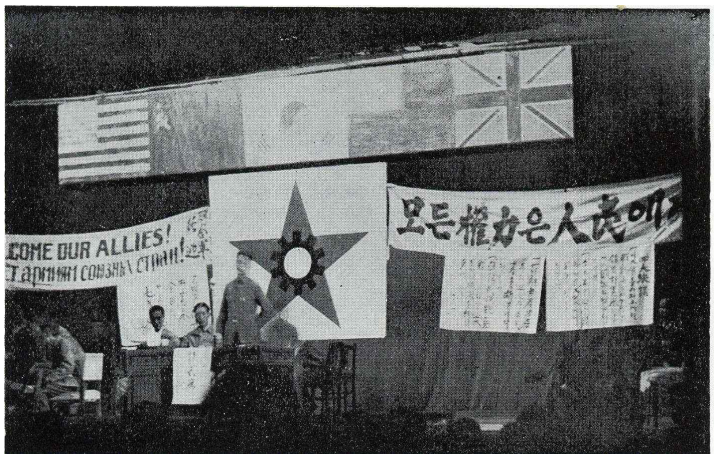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배워야 점도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9월총파업·10월인민항쟁

전평의 조직과 활동 (1945.11-1948.9)

전평 결성식, 1945년 11월 5,6일



*전평의 깃발은 “투쟁과 희망”(『전국노동자신문』 1947년 5월 9일자)을 상징했음. 전평의 깃발은 “흰 바탕 붉은 별 속에 「기야」를 넣고 붉은 줄을 가로 친” 모양이었음(『전국노동자신문』 1946년 8월 23일자). 여기서 “「기야」”는 ‘기어(gear)’를 말할 것임. 1945년 11월 16일자 『전국노동자신문』에는 사각형의 바탕에 큰 별 하나와 별 중앙에 자세히 보면 ‘기어’, 즉 둥근 톱니바퀴로 보이는 모양의 위와 같은 사진이 실려 있음.

1. 미국 제국주의 군사정권 실시

*전평의 결성과 활동에 영향을 준 정치적 배경(요인)

1) 미군정 실시 목적

-정치 군사적으로 반소반공 기지로서 자본제국가 구축.
-사회 경제적으로 미국독점자본주의에 종속하는 자본주의체제 확립.
-미제의 이러한 이해관계를 미제를 대신해서 관철해 줄 수 있는 대리세력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육성하고 그 조건을 마련하는 것(물론 이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억압하고 탄압하여 무력화하는 것은 필수적).

*이러한 목적을 가진 미군정 실시는 38선 이남지역에서 ‘인민정권’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였고, 친일파 처단도 불가하게 하였으며, 토지개혁도 연기시켰으며, 적산 및 노동문제의 해결도 민중 및 노동자가 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였음. 게다가 미군정이

실시한 식량정책은 인민의 생활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음,

*그러나, 8.15해방 후 전평 등 인민세력들은 '인민정권'을 수립하여 일제 지배 하에서 형성된 사회경제구조와 정치구조 등만 아니라 친일파 청산 문제, 토지개혁 문제, 적산 및 노동문제, 식량문제 등을 민중 및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전평 등 '인민정권'을 수립하려고 하는 인민세력들과 미군정(친일친미파, '우익'세력, 부르주아지 등 미군정의 대리세력)은 끊임없이 잠재적으로나 공개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대립하고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었음. 그 중에서 일대격전이었던 것이 바로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이었음.
*대중투쟁(9월총파업 10월인민항쟁)을 통해 미군정을 철폐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겠다는 것.

2) 군대와 경찰

-미군병력 7만 7천 643명이 1945년 11월말 현재 38선 이남의 각 도(道)에 주둔.
-미군정 경찰은 1946년 8월 23,655명(*'해방' 직전 남북한 통틀어 1만여 명), 경찰관서 1,883개.
-국방경비대는 1946년 1월 15일 1개 연대가 창설, 대한민국 수립 전까지 5개 여단 15개 연대 규모로 확대(1개 연대는 약 3,100여 명). 1946년 4월까지 8개 연대 존재, 11월에는 제9연대 만들었음.

3) 노동정책

-목적 : 전평 파괴, 대한노총 육성->노동착취 강화와 자본지배체제 강화.

0 노동정책의 전개

① 1945년 9월 미군정 실시 이후부터 12월까지

-노동자 자주관리운동 분쇄하여 자본주의 사회경제질서를 복구하기 위하여 귀속재산(적산) 접수하여 관리 정책 실시.
-이를 위하여 10월 30일 '국가적 비상조치'로서 법령 제19호의 '스트라이크 억압과 강제중재제도', 12월 6일 법령 제33호의 '일본인 재산의 전면 접수', 8일 법령 제34호의 '노동조정위원회 설립', 14일 관재령 제2호의 '관리인 제도' 등을 펼침.

② 1946년 1월부터 6월까지

-전평 파괴를 주목적으로 삼는 자본가들을 위해 혈한불석(血汗不惜)으로 일하겠다는 '대한노총'을 3월 10일 조작.

-미군정은 5,6월 인천 동방 노동쟁의로 대표되는 전평 노동자운동의 고양을 약화시키기 위해 전평을 노동자대표단체로 승인하여 회유(물론 전평이 노동자대표단체로 승인 받은 것은 노동자 계급투쟁의 획득물이기도 했음).
-실제로 미군정으로부터 노동자대표단체로 승인 받은 직후(6.13) 전평 집행부 일각, 즉 서기부에서 자본과 미군정에게 유화적인 '우 편향적' 경향을 띤 일련의 노동자운동 방침을 제시하기도 했음.

③ 1946년 7월부터 1947년 3월까지

-1946년 7월 23일 발표된 법령 제97호의 소위 '민주노조' 장려정책.
용어와는 달리 실제로는 대한노총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미군정은 노동자대표단체로서의 전평의 위상을 부정하고 전평 노동자운동을 탄압했음.
-전평은 1946년 9월총파업과 1947년 3월 22일 24시간 총파업 등을 전개.
-미군정은 이러한 총파업의 민주주의적 요구들을 모조리 묵살하고 살상과 투옥과 해고 등으로 철저하게 억압했음.

④ 1947년 4월 이후부터

-미군정은 기업 내에서 소위 대표노조 선거 방식을 통해서 전평을 파괴하고 '대한노총'을 육성.
-미군정은 1947년 6월 8일 "정치색을 띤 노동조합은 정당한 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실제로는 미군정에 정치색에 안 맞는 전평을 불법화하고 전평 노동운동을 탄압했음.
*여기서 정치색은 미군정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의미.

2. 미군정기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 상태

*전평의 결성과 활동에 영향을 준 사회경제적 배경(요인)

1) 일제 말 노동자 수와 1946년 38선 이남 지역의 노동자 수

일제 말 국내 노동자 수

	노동자수	구성비	비고
공장(공업)	591,494	27.9	1945년 1월 총독부
토목건축업	437,752	20.6	
육상운수	179,544	8.5	
임업	205,911	9.7	1944년 10월 현재 총독부 조사
수산업	211,520	10.0	
광업	273,863	12.9	1944년 9월 현재조선광산연맹 조사
탄광	72,561	3.4	1944년 9월 현재 총독부
농업	130,377	6.1	1943년 말 현재 지주 및 농업피용자 조사
해상운수	19,352	0.9	1944년 말 현재 총독부 조사
합계	**2,122,374**	100	

*일제 말 국내외 조선인 노동자 수는 대략 3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됨.

*1946년 11월 무렵 38선 이남의 노동자는 대략 160만 명 정도로 추산됨.

*1946년 9월 38선 이남의 인구는 19,369,270명.

남조선 지역별 사업장 수와 취업노동자 수

	사업장 수			노동자 수		
	1944.6	**1946.11**	**감소율**	**1944.6**	**1946.11**	**감소율**
서울	2,337	1,123	51.9%	66,898	35,763	46.5%
경기	1,159	698	38.8	63,625	19,753	69.0
충북	222	137	38.3	6,583	3,970	39.7
충남	441	209	52.6	14,219	5,550	61.0
전북	679	437	35.7	18,389	7,299	60.3
전남	1,040	581	44.1	24,843	10,138	59.2
경북	1,424	788	44.7	29,085	12,314	57.7
경남	1,618	1,032	36.2	61,565	20,378	66.9
강원	331	212	36.0	13,480	6,391	52.6
제주	72	32	55.6	1,833	603	67.1
합계	**9,323**	**5,249**	**43.7**	**300,520**	**122,529**	**59.3**

*취업노동자(정규직, 비정규직)가 대략 60만 명 이내로 추산됨.

*이 중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20여만 명, 나머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추산됨.

2) 노동자대중의 빈곤의 심화 : 실업자의 격증, 실질임금의 급락.

0 **실업자의 격증** : 실업노동자는 적어도 110만 명 이상.

1946년 11월 15일 현재 실업노동자 수

	전재	실업	계
서울	16,773	22,460	39,233
경기	6,883	8,050	14,933
충북	24,209	15,745	39,954
충남	19,993	23,723	43,716
전북	37,045	28,719	65,764
전남	70,283	36,694	106,977
경북	152,239	197,638	349,877
경남	284,578	111,303	395,881
강원	4,609	17,766	22,375
제주	20,591	2,422	23,013
합계	**637,203**	**464,520**	**1,101,723**

0 **실질임금의 급락**

1945년 - 1947년 실질임금 정도

	1945			1946			1947		
	임금 지수	소매물 가지수	실질 임금	임금 지수	소매물 가지수	실질 임금	임금 지수	소매물 가지수	실질 임금
1	246	238	103.36	3,581	8,543	41.92	11,450	33,272	34.41
2	247	238	103.78	3,865	9,353	41.32	11,711	38,894	30.26
3	253	242	104.55	4,212	11,645	36.17	12,668	38,486	31.92
4	275	249	110.44	4,960	13,312	37.26	14,043	36,517	38.46
5	277	254	109.06	6,570	13,772	47.71	14,442	36,101	40.00
6	282	259	108.88	6,772	14,932	45.36.	15,093	37,431	40.32
7	293			6,996	15,808	44.26	15,666	38,635	40.55
8		3,359		7,371	17,795	41.42	15,930	39,665	40.16
9		3,813		9,262	19,317	47.95	16,299	41,444	39.33
10		4,906		9,667	21,195	45.61	16,575	42,951	38.59
11		5,795		10,976	22,462	48.86	17,235	51,753	33.30
12	2,724	7,335	37.14	11,186	26,622	42.02	17,088	55,961	30.54
8 년 평균				**7,118**	**16,211**	**43.91**	**14,843**	**40,926**	**36.27**

*미군정기의 실질임금은 일제 식민시대인 1936년의 3분의 1을 조금 넘었음.

*자본과 자본주의국가(미군정)의 생산력 파괴로 인하여 노동자대중의 빈곤은 심화되었음.

3.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조직

*조직적 측면과 이데올로기적 측면

1) 전평 결성

-노동자들은 위와 같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상태(*자본제사회와 자본제국가) 속에서 그것에 맞서고 넘어서기 위해서 전평을 결성했음.*혁명세력(반미제.인민정권 수립세력)과 반혁명세력(미제,자본제국가 수립세력)의 대립구조 형성.

-선진노동자들과 조선공산당(1945.9.11)은 1920년대부터 추구했던 전국적 노동자 대중조직과 산업별노조 조직 활동경험을 역사적 전제로 삼아 1945년 9월 26일에 전평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 *전평 결성에 영향을 준 역사적 전제(요인).

-이러한 준비위원회의 활동에 연대하고 협동하여, 전국 각지의 중요 산업도시에서 노동자 자주관리운동과 노동조합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던 최소한 21여만 명 이상의 조직노동자들은 515명의 대의원들을 뽑았음. *전평 결성 직전의 주체적 상황.

-이들 대의원들은 10월 26일부터 서울에 올라와 11월 4일까지 16개의 전국적 산업별 단일노조 등을 결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515명의 대의원들이 11월 5,6일에 전평 결성대회를 개최했음.

-이상과 같은 '상·하향식' 활동 방식을 통하여 조직 노동자들은 이 땅의 노동자운동의 역사상 초유의 산업별 조직형태에 입각한 전국적인 노동자 대중조직인 전평을 결성.

-이후 전평은 자본과 자본주의국가의 억압과 착취 속에서 그것에 대항하고 넘어서기 위한 노동자계급 투쟁의 주체의 하나로서 활동했음.*전평은 변혁적(경제적 이익+인민정권 수립 추구) 노조.

2) 전평 조직 상황

-전평 결성 당시 최소한 21만여 명 이상, 최대한 50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16개의 전국적 산업별 단일노동조합과 그리고 합동노동조합 그 산하의 1천 194개 분회 등에 소속된 조직노동자들이었음.

-그들은 개성을 제외한 5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인 20개의 도시, 즉 서울·인천·대전·군산·전주·목포·광주·대구·부산·마산·진주·해주·평양·진남포·신의주·원산·함흥·청진·성진 그리고 인구 3만 이상이 거주하는 나진의 조직노동자들이었음. 나머지 조직노동자들은 59개의 중소도시에 거주했음.

-이상의 모두 80곳의 지역들은 당시 남북조선의 239개 행정구역의 33%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 38선 이남 지역들이 42곳, 이북 지역들이 38곳이었음.

전국적 산별노조 결성과 간부(1945년 11월 4일 현재)

산별노조	결성 년 월 일	간부 이름
광산	1945.11.1.	서기장: 마수길
금속	1945.11.2.	집행위원장: 현훈 부위원장: 백일성
철도	1945.11.2.	집행위원장: 이성백 부위원장: 오병모
출판	1945.11.2.	집행위원장: 장규경
통신	1945.11.3.	
섬유	1945.11.3.	집행위원장: 한용규 부위원장: 박일용
토건	1945.11.3.	집행위원장: 한철 부위원장: 김재덕
화학	1945.11.3.	집행위원장: 곽이형 부위원장: 박수갑
일반봉급자	1945.11.3.	집행위원장: 김호영 부위원장: 이학종
식료	1945.11.3.	집행위원장: 현초득 부위원장: 이등록
목재	1945.11.4.	부위원장: 조득형
전기	1945.11.4.	집행위원장: 문은종 부위원장: 최성세
조선(造船)	1945.11.4.	집행위원장: 위무황 부위원장: 안호덕
교통운수		
어업		
해원항만		

전평의 조직 상황(1945년 11월 4일 현재)

노조별	지부수	분회수	조합원수	노조가결성된도시수	1분회당 평균조합원수	1도시당 평균조합원수	1도시당 평균분회수
금속	19	208	26,725	25	128.5	1,113.5	8.7
철도	20	45	34,728	15	771.7	2,315.2	3
교운		127	23,785	15	187.3	1,585.7	8.5
광산	가입광산 88개소	75	23,281	31	310.4	751.0	2.4
토건	17	111	14,215	33	128.1	430.8	3.4
화학	19	118	28,215	20	239.1	1,410.8	5.9
통신	20	8	496	7	62.0	70.9	1.1
식료	23	117	7,746	26	66.2	297.9	4.5
전기	11	45	5,802	9	124.5	644.7	5.0
섬유	10	96	15,340	16	159.8	958.8	6.0
출판	19	77	2,180	16	28.3	136.2	4.8
일반봉급자	18	20	3,819	11	191.0	347.2	1.8
목재	26	53	2,628	19	49.6	138.3	2.8
어업		23	4,821	6	209.6	803.5	3.8
조선	13						
해원항만		23	6,503		282.7		
합동		48	6,989		145.6		
계	**215 (광산제외)**	**1,194**	**217,073**	**249**	**181.8**	**871.8**	**4.8**

도별	전평 결성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직이 있는 도시	도시 수
경기	서울, 인천, 소사, 수원, 고양, 장단, 여주	7
충북	청주, 충주	2
충남	대전, 천안, 공주, 예산, 조치원	5
전북	이리, 전주, 군산, 김제, 정읍, 익산	6
전남	순천, 목포, 광주, 여수, 구례, 화순	6
경북	대구, 김천, 봉화, 안동, 영주, 포항	6
경남	부산, 마산, 밀양, 진해, 진주	5
강원	강릉, 영월, 삼척, 양양, 철원, 화천, 복계, 춘천	8
함남	원산, 문천, 흥남, 함흥, 영흥, 풍산, 장전, 고원, 안변, 단천, 북청	11
함북	청진, 성진, 길주, 나진, 나남, 회령, 명천, 무산, 경원	9
황해	해주, 사리원, 신천, 안악, 겸이포, 재령, 서흥, 옹진	8
평남	평양, 진남포, 개천	3
평북	신의주, 영변, 박천, 강계	4
계		80

전평 결성에 참여한 산업별 분회 조직률과 노동자 조직률
(1945년 11월 4일 현재)

산업부문	사업체 수	분회 수	비율	노동자 수	조합원 수	비율
철도		45		34,885#	34,728	
금속	654	208	31.8	36,161	26,725	73.9
기계기구	1,354			38,074		
화학	927	118	12.7	48,264	26,215	54.3
교통운수	1,209	127	10.5	67,402	23,728	35.2
광산	1,238	75	6.1	178,858	23,281	13.0
섬유	2,603	96	3.7	78,069	15,340	19.6
토건	1,626	111	6.8	165,006	14,215	8.6
식료	2,190	117	5.3	26,517	7,745	29.2
해상운수				19,352	6,503	33.6
전기	123	45	36.6	5,871	5,802	98.8
어업		23		211,520	4,821	2.3
일반봉급자	652	20	3.1	20,545	3,818	18.6
목재	1,999	53	2.7	26,070	2,628	10.1
출판	605	77	12.7	9,733	2,180	22.4
통신		8			496	
조선						
합동		48			6989	
계	15,180	1,194	7.9	931,442	217,073	23.3

3) 조직 규모의 변천

-1946년 2월에는 조합원이 57만여 명으로 증가했음.
-북조선노동총동맹이 전평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직후인 1946년 4월 29일 현재 남조선의 전평 산하 노동조합원들은 59만여 명.
-9월총파업투쟁 이후인 1946년 11월 미군정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전평 산하 분회가 1천 111개, 조합원수는 24만 6천 777명.

-1947년 3월 22일 24시간 총파업 이후인 4월 15일자 『전국노동자신문』에서 당시 전평 부집행위원장 이인동은 26만여 명의 조합원이 있다고 했음.
-1948년판『조선년감』에 의하면 1947년 4월말 현재 전평 조합원은 35만 4천 417명이었고, 9월말 현재는 52만 825명.
-그러나 1947년 9월 현재 미군정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전평 조합원은 2천 400여 명에 불과했음. 이때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결렬시키는 등 미국의 국제적 냉전정책이 조선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시기.
미군정은 그동안 일정하게 가지고 있었던 반파쇼 민주주의적 성격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파쇼적인 탄압정책을 강화하여 전평 조직을 지하로 밀어 넣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 노동부가 조사한 전평 조합원수가 사실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음.
-그것은 전평 등에 의해서 전개된 1948년 2·7 구국투쟁에 다양한 투쟁형태들로 참가했던 약 150만 명의 인민 중에서 파업투쟁에만 8만여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는 점, 그리고 5·8 단선단정 반대총파업투쟁도 전평 노동자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음. 따라서 『조선년감』에 나온 전평 조합원수가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음.

시기별로 본 전평 산하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 상황

	1945년 11월 4일			1946년 2월 15일			1947년 4월	1947년 9월	1948년 2월
노조별	지부수	분회수	조합원수	지부수	분회수	조합원수	조합원수	조합원수	조합원수
철도	20	45	34,728	14	117	62,439	30,981	32,715	20,672
금속	19	208	26,725	20	215	51,364	16,596	18,671	12,565
화학	19	118	26,215	18	167	49,015	18,013	18,915	11,406
교통운수		127	23,728	28	140	58,041	38,311	39,103	40,839
광산	가입광산: 88개소	75	23,282	9	123	64,572	15,648	16,254	16,712
섬유	10	96	15,340	16	121	30,268	23,252	23,906	22,415
토건	17	111	14,215	17	127	59,118	21,025	41,227	33,525
식료	23	117	7,745	23	108	22,523	8,484	15,308	12,575
해원항만		23	6,503	7	9	4,720	12,579	12,819	13,118
전기	11	45	5,802	14	54	15,742	12,687	12,815	11,957
어업		23	4,821	9	50	35,653	17,328	35,125	35,624
일반봉급자	18	20	3,818	14	107	17,065	40,142	52,163	43,134
목재	26	53	2,628	11	125	30,722			
출판	19	77	2,180	16	65	4,368	11,771	11,982	12,463
통신	20	8	496	9	40	10,215	8,906	13,225	12,325
조선	13			10	38	5,549			
합동		48	6,989		74	53,101	58,860	102,879	113,127
양화공							2,539	5,391	3,388
목공							3,752	8,124	5,131
이용직원							2,317	3,113	2,410
양복기공							4,479	9,695	8,156
약업								3,903	2,812
직업별 노조							8,657	43,572	39,249
계	215 (광산제외)	1,194	217,073	235	1,676	574,479	354,417	520,825	483,603

4) 전평의 조직체계

0 종적인 산업별체계

-국내적으로 전평의 조직체계는 그 산하에 교통운수·금속·화학·철도·섬유·식료·광산·어업·통신·전기·토건·조선·목재·출판·해원·일반봉급자 등 전국적 산업별 단일노조와 그 하부조직인 산업별지부를 각 산업도시에 두고, 지부는 다시 각 공장과 기업에 분회, 직장에 반을 두었음.

0 횡적인 지방평의회체계 : 지평에서 도평으로

-지방적 노동자운동을 기민성 있게 지도하기 위하여 각 중요 산업지대에 지방평의회를 두고 그 지방의 산업별지부를 총괄하도록 했음(그러나 지부는 지평의 하부조직은 아님).
-지방평의회 소재지에 근접한 특수지대에는 그 산하에 산업별(지부)연락위원회를 두었음.
-1946년 2월까지 지방평의회를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마산·군산·광주·목포·삼척·전주 등 11개 도시에 두었음.
-그리고 1947년 6월 무렵 이러한 지방평의회를 산하에 두는 8개(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의 도평의회를 설치했음. 또한 소지방 도시에는 합동노동조합을 조직했음.

0 전평과, 38선 이북의 노동조합, 직업총동맹

-한편 38선 이북에는 광범한 자치권을 가진 전평 북조선총국이 1945년 11월 30일 평양에서 결성.
-그러나 북조선의 민주주의 발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1946년 4월 중순 이후 조직적인 측면에서 전평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북조선노동총동맹은 5월 하순에 북조선직업총동맹으로 개편.
-지방평의회는 사리원·원산·함흥·흥남·평양·성진·청진·진남포·해주·신의주 등 10개 도시에 설치됨.
-전평과 북조선직업총동맹은 목적과 조직체계 등의 공통성을 가지고 연대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 비유적으로 말하면, 몸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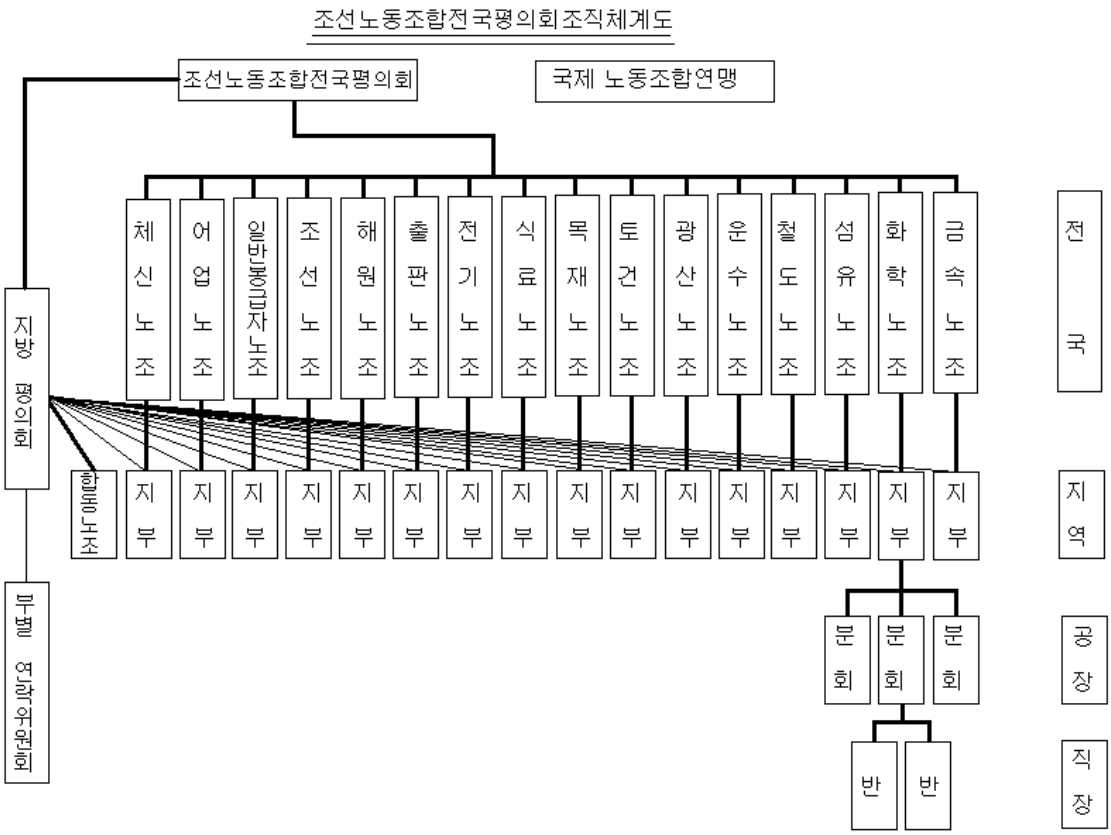
0 세계노동조합연맹[1]의 지부

-전평은 국제적인 조직적 연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1946년 6월 30일 세계노동조합연맹에 가맹하여 그 지부가 되었음.
1947년 3월말에는 세계노련 극동조사단이 조선을 방문했고, 6월 중순 체코의 프라하에서

---

1) 1945년 10월 파리에서 영국 미국 소련 노조가 주도하여 결성. 1949년 11월 세계노련에서 영국 노조와 미국노조 등이 탈퇴해 런던에서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반공주의, 노사협조주의 경향 강함) 결성.

열린 세계노련 총회와 집행위원회에 이인동과 한철이 전평의 대표로 참가했음.
특히 한철이 참가한 세계노련 제1분과회의인 약소민족회의는 '약소민족 또는 국가의 노동자운동을 원조하는 문제를 토의하는' 「약소민족노동회의」의 설치와 '극동제국의 노동자운동을 원조하고 세계노련과의 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항구적 기관'으로서의 「극동 서기국」을 설치할 것 등을 결정.
나아가 전평은 미국의 전국산업별조합위원회(CIO)와의 연대도 추구했음.



0 전평 중앙상임위원회

-결성 당시, 상임위원은 위원장 허성택 부위원장 박세영·지한종을 포함하여 26명.
10개의 전문 부서를 설치. 서기부(책임자 한철), 조직부(책임자 현훈), 선전부(책임자 정재철), 조사부(책임자 문은종), 쟁의부 (책임자 이성백), 재정부(책임자 유형식), 청소년부(책임자 이홍섭), 실업대책부(책임자 박봉우), 부인부 (책임자 허균), 원호부(책임자 조맹규) 등이었음.
상임위원 26명 가운데서 17명은 일제하에서 노동자운동·공산당운동·학생운동·농민운동·청년운동·신간회운동 등에 참가했음.
특히 집행위원장 허성택과 부집행위원장 박세영은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졸업.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 이후 열린 1946년 12월 22일 전평 상임위원회에서 서기부 책임자 한철이 경질되고, 쟁의부가 산업건설부로 개편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음.

-1947년 전평 전국대회(2.16-18)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재선출되었고 상임위원 25명 중에서 12명이 노동자 출신 등으로 새로 선출되었음.

0 전평의 자주성과 민주성

-자본과 국가로부터의 자주성
*1945년 11월에서 1946년 3월까지의 전평 조직의 운영자금을 보면 1천 600여 만원 가운데서 90%가 조합비와 조합의 의연금이었고 8.6%가 부채였음.
*대한노총[2]의 1946년 4월에서 7월까지의 운영자금은 전평보다 3.5배 이상이 많은 5천 700여 만원이었지만 그 전부가 이승만, 안재홍 등의 기부금이었고 조합원과 노동자들의 부담은 한 푼도 없었음. 즉 대한노총은 친파쇼 부르주아 정치세력에게 매수당한 '노동자단체.

0 민주집중제적·상하향식 조직 운영

-노동자대회, 조합원총회, 대표자대회가 중요의사를 결정하고 대의원들을 선출하고 그들이 집행위원을 선출했다는 점에서 민주적. 집행위원회가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다시 평조합원들에게 지시한다는 점에서 집중제적.
-전평 산하 하부조직의 의사가 상부조직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결집된 의사를 다시 하부조직으로 내려 보낸다는 점에서 상하향식 조직 운영 방식.
*전평노조의 이중호응성전략(조돈문) : 당세포와 작업반모임.

0 전평과 조선공산당의 상호관계

-전평 조합원대중(평조합원들과 지도부)의 일부가 조공 당원이었으며, 동시에 조공 당원이 전평 조합원이었다는 정체성의 중첩성은 내부 구조적으로 전평의 입장이 조공의 정책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조공의 입장이 전평의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음.

---

2) '대한노총'은 1946년 3월 10일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총재 이승만)의 청년부장이며 공장주인 김구(金龜)와 미군정 노무과의 박택, 이승만, 김구(金九), 김규식, 안재홍, 조소앙 등의 미군정의 자문기관인 '민주의원'들, 즉 부르주아 정치·사회세력을 대표하는 자들의 주도와 여기에 동조하는 소수의 부르주아계급 의식적인 노동자들로 만들어졌음. 그리고 '대한노총'은 "우리는 혈한불석(血汗不惜)으로 노자간(勞資間) 친선(親善)을 기(期)함" 등을 강령으로 내걸었음. 즉 '대한노총'은 자본과 자본주의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직된 노동자운동단체가 아니고 오히려 자본과 자본주의국가를 위하여 전평을 파괴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아 결성되었음. 이후 1947년 3월 '대한노총'은 제1차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강령을 크게 수정했음. 물론 이것은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 등으로 표출된 전평 노동자들과 민중의 요구에 의해 형식적인데 불과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나마 일정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평이나 직업총동맹의 그것과는 분명하게 다른 이질성을 갖고 있었음. 특히 인민공화국이나 인민위원회, 「모스크바 협정」에 대한 전평 등의 입장과 '대한노총'의 그것 사이에는 본질적이고 적대적인 차별성이 존재했음.

*전평노조의 이중호응성전략(조돈문) : 당세포와 작업반모임.

*1946년 3월 4일 현재 G-2 미군정 보고에 의하면, 남북 공산당원 43,300명 정도.
평북 5,000명, 평남 4,500명, 황해 5,500명, 함북 4,500명, 함남 5,000명,
강원 3,500명, 충북 1,800명, 충남 1,500명, 전북 2,000명, 전남 3,000명, 경북 2,000명,
경남 2,000명, 경기 3,000명.
그리고 전평 조합원 599,200명.

0 전평의 당면 투쟁목표 : '일반행동강령'

1. 노동자의 일반적 생활을 보장할 최저임금제를 확립하라.
1.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1. 7일 1 휴가제와 년 1개월간의 유급휴가제를 실시하라.
1. 부인노동자의 산전산후 2개월 간 유급휴가제를 실시하라.
1. 유해위험작업은 7시간제를 실시하라.
1. 14세 미만 유년노동을 금지하라.
1. 노동자를 위한 주택, 탁아소, 음악실, 도서관, 의료기관을 설치하라.
1.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단체계약권을 확립하라.
1. 해고와 실업을 절대반대 한다.
1. 일본제국주의의 매국적 민족반역자 및 친일파의 일체 기업을 공장위원회(관리위원회)에서 보관 관리권을 획득하라.
1. 실업, 상병, 노폐노동자(傷病, 老廢勞動者)와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社會保險制)를 실시하라.
1. 착취를 본위로 한 일체 청부제(請負制)를 반대하자.
1.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파업, 시위의 절대자유.
1. 농민운동을 절대지지하자.
1. 조선인민공화국을 지지하자.
1. 조선의 자주독립 만세!
1. 세계노동계급 단결 만세!

-즉, 최저임금제, 8시간노동제, 유급휴가제, 완전고용제, 사회보험제, 단체계약권,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파업의 자유, 노동자의 자주관리, 노농동맹, 인민공화국지향, 자주독립,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 등.

-당면 투쟁목표의 성격 :

역사적으로 보면 1930년대 전반기의 조공 재건운동세력이나 혁명적 노조운동의 '사유재산 철폐나 노농소비에트 건설' 등의 최대강령은 계승하지 않은 것.
1920년대와 1930년대 후반기 이후의 조공과 공산당 재건운동 세력과 혁명적 노조운동의

인민공화국 수립노선이나 '반파쇼인민전선 또는 반제민족통일전선' 노선을 최대강령으로 계승한 것.
즉, 당장에 자본-임노동관계 철폐를 추구하지 않는 것.

0 전평의 자본과 국가(미군정)에 대한 방침

-자본과 국가에 대한 '좌우 편향' 극복 :
'양심적'민족자본에 대해서는 협력,'악질적'자본에 대해서는 투쟁.
미군정(미국)의 반파쇼민주주의적 측면에 대해서는 협력, 파쇼적반민주주의적 측면에 대해서는 투쟁.

4. 전평의 투쟁

*사회변혁의 관건은 정치권력 장악에 있음. 모든 부문운동 및 사회운동은 정치권력을 둘러싼 갈등과의 연관 속에서 살펴야 함.
*즉 전평의 투쟁은 자본제사회와 자본제국가를 인민민주주의사회와 인민국가로 바꾸기 위한 투쟁을 벌임.
*'대중투쟁'을 통한 '미군정 철폐'와 '인민정권' 수립.

1) 노동자 자주관리운동

① 노동자 자주관리운동 규모
-1945년 11월 4일 현재, 16개의 산업별노조 등에 728개의 노동자 자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이와 관련된 노동자 수는 8만 8천여 명을 헤아렸음.
-이것은 당시 1,194개의 전평 분회 중에 약 61%의 분회에 노동자 자주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조합원 수 217,073명 이상 가운데 약 41%의 조합원들이 노동자 자주관리위원회와 관련되어 있었음을 말함. 노동자 자주관리위원회가 구성된 728개의 사업체는 당시 15,180개의 전체 산업별 사업체 수의 약 4.8%, 노동자 자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8만 8천여 명은 전체 산업별 노동자 수 931,442명 이상 중에서 약 9.4%에 해당되었음.

②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의 성격과 유형
-반자본주의 지향적인 '밑으로부터의 자주관리운동'.
-자본주의체제 내적인 '위로부터의 관리운동'.
-'노자(勞資)공동'의 관리운동과 '노정(勞政)공동'의 관리운동.

③ 노동자 자주관리운동과 전평의 관계
-전평 결성 당시 「선언문」은 '노조의 생산관리'를 주장했고, 「일반행동강령」은 '매국적 민족반역자 및 친일파의 일체 기업을 공장위원회(관리위원회) 에서 보관 관리권을 획득'을, 1946년 1월 전평 지령 제6호 「산업건설운동을 중심으로 한 당면투쟁」은 분회의 공장관리운동 방침을 제시.

2) 반미飯米투쟁

-전평은 1946년 1월 지령 제7호 [쌀 획득투쟁과 실업자의 조직] 방침을 제시함.
-즉, 전평은 1946년부터 산업별, 지역별로 반미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여 공장 회사 속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공장 회사 밖의 노동자들(실업노동자, 예비노동자=학생, 가사노동자=부녀들, 불안정 노동자들인 도시빈민과 농촌빈민 등)로 이뤄진 노동자대중통일전선의 형성하려고 하였음.
-이러한 반미투쟁은 노동자 파업투쟁과 '인민항쟁'을 결합시키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기도 하였음.

3) 총파업투쟁

전평 관계 파업통계

기간	건수	참가인원 수	피살	피검	해고
1945.8~1946.8	1,299	226,998		1,090	2,331
1946.9~10(총파업)	472	173,404	25	4,780	7,767
1946.11~1947.2	67	24,434		361	1,553
1947.3(총파업)	550	162,050		646	2,883
1947.4~7	258	28,908		616	753
1947.8~1948.1	231	22,648		632	1,079
1948.2(총파업)	374	80,471	미상	1,607	1,216
계	2,371	722,913	25	10,741	18,599

*전평조사 통계표, 피해는 파업이 원인이 된 것만을 계상함, 연인원이 아님.

① 1946년 9월총파업(10월인민항쟁) :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 참조.

② 1947년 3·22 총파업

-전평 지도부는 1947년 3월 22일 '남조선해고폭압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국적이고 전 산업부문의 노 동자들을 망라하는 '24시간 총파업투쟁'을 결정.
-3월 22일 24시간 총파업투쟁은 미군정 등에 의하여 자행된 노동자대중과 민중의 생존권의 유린, 50여 명의 전평 집행위원의 검거와 집행위원장 허성택과 부집행위원장 박세영 등의 투옥 등으로 상징되는 노조활동의 자유와 권리 박탈, 3·1절 평화시위 민중에 대한 경찰의 발포와 학살 등과 같은 반민주적이고 파쇼적 폭압 등의 사태에 항의하기 위하여 전평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하루만의 파업건수가 550건으로 9월 총파업 때의 472건보다 더 많았고, 파업참가자 수도 9월 총파업 때의 17만여 명에는 못 미치지만 16만여 명이나 되었음.

③ 1948년 2·7 구국총파업

-미국은 1947년 '8·15폭압'이라는 반공쿠데타를 통하여 국제적인 '좌우연합전선'격인 미소공동위원회 사업을 파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에 의해서 결정된 미국의 조선정책인 '남북총선거'를 대행하기 위한 유엔조선위원단이 1948년 1월 7일 남조선에 들어왔음.

-그러자 전평 산하 조합원들의 일부는 8일에 이미 파업투쟁으로 항의하고, 28일에는 전평과 산하 산업별 전국노조 등이 유엔조선위원단의 활동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음..
-2월 7일을 기하여 전평이 조직한 '유엔조선위원단항의남조선총파업위원회'는 구국 총파업투쟁을 전개.
-이 총파업위원회는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적산과 중요산업의 국유화와 인민의 관리' 등의 경제적 요구와 주장 그리고 '단선단정의 반대와 외국 군대 철퇴 하 남북통일 자주정부 수립'** 등의 정치적 요구와 주장이 담긴 「총파업 선언서」와 「항의서」를 유엔위원단에 보냈음.
이렇게 경제적·정치적 기치를 내걸고 전개된 '2·7 구국투쟁' 3일 동안에 8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투쟁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남조선 각 지방에서 약 150만 인민이 동참했음.

유엔조선위원단 항의 구국투쟁 3일간 통계표(1948.2.7-9)

	파업투쟁	맹휴투쟁	시위	집회	봉화	쌀투쟁	소계	총동원수
서울	21,897	3,850	39,780	3,840	1,450		45,070	70,817
경기	5,455		19,020	12.940			31,960	37,415
충북	140		350	1,100	850		2,300	2,440
충남	740		12,823	5,450	7,974	950	27,197	27,927
전북	2,577		18,282	13,445	1,100		32,826	35,383
전남	5,375	26,952	28,369	269,083	500	1,425	300,032	332,359
경남	28,932	9,550	171,834	189,083	11,134	6,500	328,551	417,033
경북	14,425	13,005	284,562	235,611	6,580	500	525,253	525,253
강원	950		100				1,030	5,000
계	80,471	53,357	575,119	729,407	29,588	9,375	1343,289	1,477,117

	선전투쟁			피해자수				
	삐라	벽보벽서	계	사망	중경상	피검	계	비고
서울	335,000장	10,670개소	345,670		20	365	385	
경기	122,280		122,280			194	194	
충북	52,660		52,660				243	243
충남	516,750	90,348	60,7098	2	6	332	340	
전북	248,291	3,415	221,704			1,272	1,272	미확유(有)
전남	1,090,136		1,090,236	2	8	1,621	1,631	
경남	647,673	131,294	778,997	22	99	2,199	2,320	
경북	777,300	5,000	782,300	31	13	4,304	4,548	
강원	5,000		5,000			124	124	미확유(有)
계	3,793,190	240,727	4,033,917	57	146	10,854	11,037	

④ 1948년 5·8 단선단정반대총파업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소총회는 1948년 2월 26일 남조선만의 단선단정을 결정.

-그러나 전평은 남조선만의 단선단정을 반대.
드디어 전평 등이 주도하는 '남조선단선단정반대투쟁총파업위원회'는 5월 8일 노동자와 농민, 소시민과 애국동포를 향해 「총파업 선언문」을 발표하고 파업투쟁을 전개.

전평 산하 조합원 등이 입은 테러 · 폭압 피해상황(1945.8-1948.4)

기간	건수	피습	피살	중상	경상	피검
1945.8~1946.8	193	1,430	4	323	503	1,805
1946.9~10	56	1,721	17	249	1,753	2,689
1946.11~1947.2	25	1,133	6	106	504	669
1947.3	43	1,880	4	246	74	1,756
1947.4	20	202	11	34	86	1,073
1947.5~7	183	1,639	3	654	983	1,104
1947.8~1948.1	55	73		5	57	442
1948.2	8	34		9	23	167
1948.3~4	6	11	1	3	5	22
계	586	8,323	46	1,629	3,988	9,747

4) 인민정권 수립운동

-인민정권의 기반은 반파쇼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즉,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한 소시민·중간층, '양심적' 민족자본가 등의 인민들을 반파쇼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정권을 담당하는 주체로 봄.
-인민정권이 인민공동소유화에 기초하는 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것으로 봄.

① 조선인민공화국(1945.9-1945.12) 지지
-조선인민공화국과 지방인민위원회 건설
-그러나, 미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인하고 지방인민위원회 파괴

②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 통한 인민정권 (1946-1947.8) 확립
-이제, 전평 등은 [모스크바 삼상협정]의 총체적 실천(미소공위 사업)을 통한 인민정권 수립하려고 함.
-그러나, 미군정(친일친미파, '우익', 부르주아지 등)은 모스크바 삼상협정·미소공동위원회 파괴를 통한 자본주의 국가 수립하려고 함.
-1946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 사업이 결렬되자, 전평 등은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 같은 대중투쟁을 통한 미군정을 인민정권으로의 이양하라고 요구. 동시에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은 미소공위 사업의 재개를 촉구하기 위한 압력투쟁이기도 함.

③ 미소양군 철퇴 후 남북총선을 통한 인민정권 (1947.8-1948.9) 수립
-미국의 1947년 '8·15 폭압'(일종의 반공쿠데타)을 통해 미소공위 사업 파괴.
-즉, 미국은 파쇼적이고 제국주의적 성격을 전면에 드러내 미소공위 사업 통한 인민정권 수립 세력을 탄압.

-미국은 1947년 9월 '조선문제'를 자기들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에 이관.

-그리하여 미국은 38선 이남에서의 단독선거 강행(1948.5.10)하려고 했음.
-이에 전평 등은 '미소 양군의 철퇴 후 외국의 간섭 없는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조건과 환경 아래서' 남북총선을 통하여 인민정권 수립 주장.
-또한 전평 등은 단선단정 반대투쟁과 인민정권 수립투쟁 : 1948년 2.7 구국투쟁, 제주도 4.3 항쟁, 5.8 총파업투쟁, '남북협상' 통한 인민정권 수립운동.
-그러나, 미군정은 1948년 5.10분단선거를 강행하고 8.15에 분단정부인 대한민국을 내놓음.

-그러자, 전평은 38선 이남지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1948.9.9)에 참여하게 되었음(전평 위원장인 허성택은 노동상으로 선임되었음).

5. 전평의 조직적 '지하화'와 이데올로기적 '생존'

-8.15 이후 미군정기 3년 동안 전평을 비롯한 인민정권을 수립하려는 세력들이 자본제 국가를 고수하려는 미군정에 대항하여 치열하게 싸웠지만, 나중에 보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군정에게 패배했음.
-그리하여 38선 이남지역에 전평의 지향과 활동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대리세력에 의한 '반민주주의적'인 사회와 국가가 수립되는 전후에 전평은 지하화 하였음.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5일 전평은 복구된 서울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승엽)에게 '정당사회단체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상에 나타났음. 이 신청서에 의하면 전평의 사무실은 서울시 남대문로 5가 1번지에 있었고, 전화번호는 본국 5711번이었음. 위원장은 현훈, 부위원장은 문두재, 부서로는 조직부, 선전부, 비서부, 총무부와 그 책임자가 있었음. 조직부 산하에는 철도, 전기, 체신, 광산, 출판 등의 산업별 책임자와 경성지방 책임자가 있었음.

-그러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전평의 인민정권 수립 지향은 38선 이북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겠음(물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전평 조합원들이 원했던 그 '인민정권'인지와 전평 조합원들이 추구했던 '인민정권'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또 다시 따져봐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평이 추구했던 세상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들이 역사적 DNA로 형성되어서 현실적 DNA로 전환되는 때를 기다리고….

1946년 9월총파업

지역별 파업투쟁 규모(9월 23~11월 11일)

도별	군	파업투쟁	지방평의회	**참여율
경기	인천	22,000		
	수원	5,800		
	기타4	7,000		
	계	34,800	인천지평 20,000	174
충북	제천	1,500		
	기타	300		
	계	1,800		
충남	기타5	8,000		
	계	8,000	대전지평 10,000	80
강원	기타3	3,000		
	계	3,000	삼척지평 30,000	10
경북	대구,달성	30,000		
	상주	2,000		
	영천	1,200		
	기타14	20,000		
	계	53,200	대구지평 38,000	140
경남	부산	55,000		
	통영	1,200		
	마산	6,000		
	동래	1,800		
	기타13	9,000		
	계	73,000	부산지평 35,000 마산지평 10,000	162
전북	이리	3,000	군산지평 12,000	
	계	3,000		25
전남	광주	4,000		
	목포	4,500		
	화순	2,000		
	기타6	12,000		
	계	22,000	*광주지평 15,000 목표지평 15,000	73
서울		72,088	*서울지평 50,000	144
총계		264,474	*지평 235,000	113

*지평 규모는 1946년 미군정 CIC보고.

**참여율은 지평조합원 규모에서 파업참여수의 백분율.

서울 산업별 파업투쟁 규모(9월 24일~11월 11일)

산업별	회수	파업참가수	해고	피검자	부상자	사망	계	*전평조합원수	**참여율
철도	22	29,898	1,080	1,671	650	3	3,404	40,529	73.8
교통	4	11,388	205	212	30		447	37,772	30.1
전기	2	2,520	50	31	50		131	8,853	28.5
출판	33	5,150	117	22	58		197	3,404	151.3
금속	14	2,442	31	91	20		142	32,796	7.4
화학	8	3,224	145	78	30		253	19,622	16.4
식료	2	354		35	30		65	12,511	2.8
섬유	2	4,538	5	41	49		95	21,121	21.5
통신	4	2,060	7	16	3		26	8,590	24.0
일반	7	4,154	303	21	10		334	2,613	159.0
토건	1	6,360						33,116	19.2
계	**99**	**72,088**	**1,943**	**2,218**	**930**	**3**	**5.094**	**220,927**	**32.6**

*전평조합원수는 1946년 2월 15일 전평조합원 수(38선 이북 포함)에서 1946년 2월 25일의 북조선총국 조합원 수를 뺀 38선 이남지역의 전평조합원 수.
**참여율은 산업별 전평조합원 규모에서 파업참여수의 백분율.

1) 9월총파업의 배경 : [총파업 선언] 중에서 - 미군정 실시 1년 동안의 모든 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만 ->'미군정 실시 목적'에 따른 필연적 결과

*미군정의 실시 목적
-정치 군사적으로 반소반공 기지 구축.
-사회 경제적으로 미국독점자본주의에 종속하는 자본주의체제 확립.
-미제의 이러한 이해관계를 미제를 대신해서 관철해 줄 수 있는 대리세력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육성하고 그 조건을 마련하는 것(물론 이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억압하고 탄압하여 무력화하는 것은 필수적).

① 미군정의 식량정책과 '사회정책'의 부재에 대한 불만

"곡창 남조선에 쌀이 없어지고 물가는 천장부지(*천정부지)로 폭등하여 천 수백만의 인민대중이 아사에 직면하고 있다. 공장·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사무원, 소시민의 생활이 기아상태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전재민과 실업자 대중은 초근목피로 호구할 수도 없는 절망적 상태에 도달하고 있으며 걸식자는 나날이 격증되고 기아의 결과인 부황병은 전 인민대중을 엄습하고 있다."

② 미군정의 광공업과 무역정책에 대한 불만 : 미군정의 적산의 접수와 관리 정책에 대한 불만, 미제의 전시잉여상품의 소비시장 정책에 대한 불만

"전기, 금속, 섬유, 화학, 출판, 광산 등의 기업은 그 대부분이 소위 '관리인'이라는 반역 모리배에게 계승되고 있으며 원료, 자재의 편재와 결핍, 생산의욕의 결여, 경영 기술의 저열 등과 백억을 돌파하는 외국상품의 유입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산업이 파멸에 빠져 들고 있다. 공장폐쇄와 조업축소는 도처에서 감행되고 해고와 노동조건의 열악화로 실업자는 나날

이 격증되고 있으며 생활의 토대는 근저로부터 파괴되고 있다."

③ 미군정의 친일 친미파,'우익'정치인들과의'과도입법의원'설치에 대한 불만

"그리고 또한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는 소위 '민주주의적 건설'을 운위하면서 정권 야욕에 눈이 어두워 날뛰는 일련의 반동 거두들의 모략과 책동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④ 미군정의 노동자들의 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실질적 불인정에 대한 불만

"그들에게 사주 받고 있는 일부 편당적 반동 경찰과 반동 테러단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공장, 직장 내에서의 노동자와 사무원의 조직활동을 탄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⑤ 미군정의 '반민주주의적' 정책에 대한 불만

"일본 제국주의와 피투성이의 투쟁을 계속하고 민주주의적 조국건설에 헌신적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에게 대하여 체포령, 살상, 검거, 투옥, 고문, 구타 등 테러 만행을 방약무인(傍若無人)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수백 명의 무장 경관대를 출동시켜 경성역을 포위하고 굶주린 시민의 쌀을 강탈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실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수삼일 전부터는 진정한 애국자, 민주주의자에게 대한 '정치 경찰', 스파이의 활동을 강화하려고 모든 정당, 사회단체,"

⑥ 미군정의 교육, 언론 정책에 대한 불만

"언론기관의 일꾼들의 '검은 표'(블랙리스트)의 작성을 획책하고 있다. 국립대학안의 강행으로 학원의 자유는 말살되고 모든 진보적인 신문은 폐쇄되어 언론의 자유도 또한 박탈되고 있다."

0 그렇다면, 해결책은?

->이와 같은 미군정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정책의 결과로 노동자와 민중의 삶은 절망적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결국 미군정(미국제국주의)의 38선 이남지역의 식민지적 점령 지배(미군정의 실시)가 그 원인이라는 것.
=>그 해결책은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 즉,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지배를 거부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것에 있다는 것.
=>이를 위하여 38선 이남지역의 노동자들이 총파업투쟁으로 '민족투쟁' 즉, 반미제민족해방투쟁, 반독점자본주의투쟁에 앞장서서 모든 인민대중과 합세하겠다는 것.

"이렇게 하여 생활고는 극도에 달하고 기아는 전 남부조선을 엄습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정치적 자유는 여지없이 짓밟히고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상 미증유의**

절망적 암흑시대가 초래되고 있다.
우리는 참을 대로 참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참을래야 더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팔을 끼고 아사를 기다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생존'을 위하여 싸우느냐를 택할 때가 왔다. 우리는 단호히 싸움을 택하였다.
우**리 남부조선의 노동자와 사무원, 전 근로인민 대중은 기아와 테러의 전율의 구렁텅이에서 전 민족을 구출하고 생존과 자유의 길을 열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하여** 남부 조선 4만 철도노동자를 선두로 '사생존망'의 일대 민족투쟁을 시작한다!
그 어떠한 탄압, 어떠한 권모술책, 어떠한 감언이설에도 굴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전취할 때까지 우리는 피투성이의 투쟁을 전개한다! **3천만 동포여 호응하자**! 손을 굳게 잡고 같이 나가자! 우리의 조국, 이 아리따운 3천리 강토, 3천만 동포의 생존을 위하여 피투성이의 투쟁을 할 때가 왔다."
*38선이북의 민주개혁도 배경의 하나.

2) 9월총파업의 시작

① 이러한 미군정 제반 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만 속에서 부산철도 노동자들은 '일급제 반대, 임금인상, 해고감원 절대반대, 급식제를 종전대로 실시, 식량배급' 등의 요구조건을 미군정 당국에 제시하면서 9월 23일에 철도파업을 단행하였음.
② 전평 철도노조는'남조선철도종업원대우개선투쟁위원회' 결성, 9월 24일 철도총파업 전개 : 철도노조의 [성명서]

"우리 4만 철도종업원은 우리 철도가 또다시 어느 제국주의의 압박과 착취와 침략의 무기가 되게 함이 아니라 조국의 민주화와 독립과 부강의 무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참다 못하여 총파업에 들어갔다. 쌀 두 말 값의 월급과 강냉이죽으로 연명하여 그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의존하여 국내 생산을 축멸시키고 종업원의 대량해고감원까지 착착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20만의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단연 파업으로써 무성의한 당국자의 반성을 촉하기로 하였다. 파업은 파괴가 아니다. 우리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건설적이라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③ 9월 25일 '남조선철도종업원대우개선투쟁위원회'가 파업에 관한 일체 권한을 전평 지도부에 위임.
④ 9월 26일 전평은 '남조선총파업투쟁위원회' 서명으로 [총파업 선언서]를 발표하여 남조선 총파업을 선언.

3) 총파업투쟁의 산업별 특징

-16개 산업별노조에 '파업위원회' 결성

① 9월총파업의 선도적 중심적 역할을 한 산업부문은 철도를 비롯하여 운수, 통신(체신,전화, 전신), 전기, 일반봉급자(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었음. 업무 특성상 '공익' 또는 사회적 보편적 이해에 민감.

② 철도, 인쇄출판, 해운, 통신 등이 파업참가가 높았음.
② 제조업 중에서는 인쇄출판 노동자들의 파업 참가율이 높았음. 직업의 특성상 선진 매체를 접할 기회가 많았고(계급의식이 높았고), 일제하에서부터 노동운동의 경험이 축적된 산업부문이기도 함.
③ 그러나, 인쇄출판을 제외하고 다른 제조업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파업 참가가 낮았음(중소기업이 대부분).

4) 총파업의 지역별 특징

-11개 지평에 '파업위원회' 결성
-파업참가 수는 경남, 서울, 경북, 경기, 전남 순으로 많고, 파업참여율은 경기, 경남, 서울, 경북 순으로 높음.

① 부산 경남 지역
-총파업 시기 : 9월 23일 ~ 10월 17일
-9월총파업 발생의 최초의 계기 마련.
-부산중공업회사 노동자들의 요구조건들 중에 '회사운영을 위한 간부회의에 노조간부를 참석시킬 것'이 포함.

② 서울 지역
-총파업 시기 : 9월 24일 ~ 10월 4일
-경제적, 정치적 등의 중심지인 수도로서의 파급력 컸음.
-경성전기노동자들은 '단체계약권 승인' 등을 요구함.
-9월 30일 용산 철도공장의 철도노동자 총파업단 본부가 미군정(대한노총 노동자들 등)에 의해 무력 진압당함(미군정이 노급 내에 '좌우' 대립 조장).
9월총파업을 선도하였고, 9월총파업의 핵심적 동력이었던 철도노동자 총파업단 본부가 강제진압되면서 철도총파업의 역량과 나아가 9월총파업의 총역량은 전반적으로 하강국면으로 전환됨.
-10월 3일, 시청 앞에서 *'적기가'와 **'해방의 노래'[3]를 부르며 파업노동자, 학생, 청년, 부

---

3) *적기가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굳기 전에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원쑤와의 혈전에서 붉은기를 버린놈이 누구냐
돈과 직위에 꼬임을 받은 더럽고도 비겁한 그놈들이다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녀, 일반시민 등 수 천 명 이상이 시위하고 삐라 살포(여기에서 '정권은 인민위원회로 넘겨라' '미국의 식민지 정책 반대' '입법기관 반대' 등의 구호 나옴). MP, CIC, 무장경관 출동.

③ 인천 경기 지역
-총파업 시기 : 9월 24일 ~ 10월 20일

-9월 30일 이후 대한노총 노동자들이 파업깨기꾼으로 나섬(미군정이 노급 내에 '좌우' 대립 조장).
-인천시청 직원들 '관리도 근로인민이다'라는 등의 구호.
-인천지역 금속부문 3개공장 회사(조선기계제작, 종연공업, 조선차량) 가 조직적 연대 파업.
-공장점거 투쟁형태도 보임(조선차량)
④ 대구 경북 지역
-총파업 시기 : 9월 24일 ~ 10월 16일(계엄령 10월 2일 발포 10월 22일 해제).
-9월 26일 대구중공업회사 노동자들은 '회사운영에 대한 공장원들도 간섭하도록 할 것'을 요구조건들에 포함시킴.
-9월 26일 대구우편국과 전화국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파업.
-9월 26일 지역수준에서 각 산업별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총파업투쟁 전개.
-10월 1일 노동자총파업과 식량배급투쟁(飯米투쟁) 등을 통하여 일반시민대중이 결합하는 대구인민항쟁으로 전화.
-10월 2일 대구인민들 대구경찰서 접수, 오후 7시 대구지역 계엄령 발포.
-10월 3일 대구인민항쟁이 인근 지역으로 파급, 경북항쟁 발생. 10월 6일 경북지역 계엄령

붉은기를 높이 들고 우리는 나가길 맹세해
오너라 감옥아 단두대야 이것이 고별의 노래란다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해방의 노래

조선의 대중들아 들어 보아라
우렁차게 들려오는 해방의 날을

시위자가 울리는 발굽 소리와
미래를 고하는 아우성 소리

노동자와 농민들은 힘을 다하여
놈들에게 빼앗겼던 토지와 공장

정의의 손으로 탈환하여라
제 놈들의 힘이야 그 무엇이랴

발포.

⑤ 전남 전북 지역
-총파업 시기 : 9월 24일 ~ 11월 4일.
-10월 30일 화순탄광 노동자 총파업 광주 도청으로 시위행진, 부녀자와 합세한 인민항쟁으로 발전. 미군과 경찰대의 무력 공격에 적극 맞서 싸움.

⑥ 충남 대전, 충북 제천, 강원 춘천 지역
-충남 대전의 총파업 시기 : 9월 24일 ~ 9월 28일.
-충북 제천의 총파업 시기 : 9월 25일.
-강원 춘천의 총파업 시기 : 9월 27일 ~ 10월 7일.
-소규모, 조직적 응집력 발휘하지 못함.

5) 9월총파업의 성격

-미군정 실시 1년 동안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정책의 의도와 결과에 대한 전면적이고 총체적 불만,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인 미제국주의자(미독점자본주의)의 대변자인 미군정 자체에 대한 거부와 그 대안으로서 인민위원회(인민정권)로 정권이양을 요구하였음.
->즉, 9월총파업의 성격은 반미제 민족해방운동적 차원과 반독점자본주의적 차원이 결합.

① [총파업 선언]의 요구조건들

1. 쌀을 달라! 노동자와 사무원, 모든 시민에게 3홉 이상 배급하라.
1. 물가등귀에 따라서 임금을 인상하라.
1. 전재민과 실업자에게 일과 집과 쌀을 달라.
1. 공장폐쇄, 해고 절대 반대.
1. 노동운동의 절대 자유.
1. 일체 반동 테러 배격.
1. 북조선과 같은 민주주의적 노동법령을 즉시 실시하라.
1. 민주주의운동 지도자에 대한 지명수배와 체포령을 즉시 철회하라.
1. 검거, 투옥 중인 민주주의 운동자를 즉시 석방하라.
1.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의 자유를 보장하라.
1. 학원의 자유를 무시하는 국립대학교안을 즉시 철회하라.
1. 해방일보, 인민보, 현대일보, 기타 정간 중인 신문을 즉시 복간시키고 그 사원을 석방하라.

② 총파업 진행 과정에서 새로 제시된 요구조건들과 행동

-미소공동위원회의 즉각적 재개 요구.
-과도입법의원(1946년 9월 20일 법령 초안을 공표, 10월 12일 군정법령 제118호로 입법의원 창설을 공표, 1946년 12월 12일 개원) 선거 반대.
-'민주독립' '식민지정책 반대'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민주독립의 해방이 없이는 우리의 경제적 부분적 요구까지 실현이 못되는 것이며"(허성

택).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겨라'(9월 30일 전평 위원장 허성택도 미군정 사령관 하지 장군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이전'하라는 요구와 '조선인민공화국 만세'를 썼음).
-대구와 부산의 중공업회사 노동자들이 회사경영에 참여를 요구(공장자주관리운동 지향 나타낸 것).
-인천의 조선차량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투쟁(공장자주관리운동 지향 나타낸 것).

③ 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일반 대중과의 연합을 통한 인민항쟁으로 전화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飯米투쟁 등을 매개로 다른 일반 대중(대부분 다른 형태의 노동자들)과 결합을 통한 인민항쟁으로 전화. 그러나 대체적으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가라앉아가면서 인민항쟁으로 전화, 즉 파업투쟁의 고양과 인민항쟁이 고양이 동시적으로 결합하는 상태였던 것은 아니었음
-노동자들의 다른 대중들과 함께 가두투쟁, 파출소 공격에 참여

④ 국제적 반자본 연대투쟁의 일환

-9월총파업은 국제적인 반자본 연대투쟁의 일환이기도 하였음.
-즉, 9월 초순부터 일본과 미국에 총파업과 대파업이 벌어졌음.
-이에 대하여 [전노신]은 9월 24일자에서 "전 세계를 진동시키는 파업 거파!", "일본 중요 산업의 대기업 백만 노동자 총파업", "일철 50만 노동자 대승리", "미국의 해원 트럭 노동자 미증유의 대파업", "해원은 마침내 대승리" 등의 기사를 대서특필하였음.

6) 9월총파업의 결과

-변혁지향적 조직역량의 손실
-조직역량이 담지한 변혁지향의 이데올로기적 역량 손실
-변혁지향적 운동의 부정적 전환점이 됨
=>바꿔 말하면, 미군정(미군정의 대리세력이 되는 친일친미세력, '우익' 세력, 자본제 지향 세력)을 위협하는 세력의 총체적 약화. 미군정의 38선 이남 지역에 지배력 강화.

전평 관계 파업통계

기간	건수	참가인원 수	피살	피검	해고
1945.8~1946.8	1,299	226,998		1,090	2,331
1946.9~10(총파업)	**472**	**173,404**	**25**	**4,780**	**7,767**
1946.11~1947.2	67	24,434		361	1,553
1947.3(총파업)	550	162,050		646	2,883
1947.4~7	258	28,908		616	753
1947.8~1948.1	231	22,648		632	1,079
1948.2(총파업)	374	80,471	미상	1,607	1,216
계	2,371	722,913	25	10,741	18,599

*전평조사 통계표, 피해는 파업이 원인이 된 것만을 계상함, 연인원이 아님.

7) 9월총파업의 패배 원인

-미군정하의 노동자총파업은 직접적으로 미군정에 대항하는 투쟁임.
-왜냐하면, 미군정의 중요산업과 대기업 등은 거의 대부분 적산으로서 앞서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을 억압하고 미군정이 접수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
-또한 미군정 국가기구도 노동자들의 노동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것.
-따라서 노동자총파업은 미군정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것임.
-이것은 38선 이남지역을 점령 지배한 미국 제국주의의 목적 달성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일 경우 미군정은 무자비한 탄압을 가할 것이고, 이것이 어려우면 미국 본토의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추가 지원 등도 예상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일차적인 길은 미군정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38선 이남 지역의 노동자계급 통일전선=노동자계급의 단결 연대와 함께 공장 회사 밖의 지역사회와 공동체 차원의 인민항쟁과 농촌의 농민항쟁 등 다른 인민들과 연합하여 미군정의 힘을 능가하는 힘을 형성해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미국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미국 노동자들의 연대파업, 가까이로는 일본 노동자들의 연대파업 등 세계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할 것임.

-> 이렇게 봤을 때 9월총파업이 패배한 원인은 일차적으로 노동자계급 통일전선=노동자계급의 단결 연대를 이뤄내지 못했고 이와 함께 공장 회사 밖의 지역사회와 공동체 차원의 인민항쟁과 나아가 농민항쟁 등과의 연합도 여의치 못했기 때문.

0 노동자계급의 분열

-이것은 노동자계급 통일전선=노동자계급의 단결 연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힘을 약화시키는 근본적 요인이 되고 공장과 회사 밖의 지역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농민들과의 연합을 이뤄내는 것도 어려워짐.

① 조직적 분열
-전평 노동조합과 '대한노총'으로 분열.
-조직 노동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로 분열.

② 이데올로기적 분열
-전평의 인민정권 수립 지향의 노동자들과 '대한노총'의 자본제국가(미군정)을 고수하는 노동자들로 분열.
-전평의 인민정권 수립 지향도 아니고 '대한노총'의 자본제국가(미군정)의 고수도 아닌 노동자들로 분열.*(자주관리위원회·자치제) 연합.

③ 취업노동자들과 실업노동자들로 분열 등
-취업노동자들보다 실업노동자들이 더 많은 실정.

④ 전평 조합원들의 불균등한 '노동조건과 물질적 조건과 의식과 행동'

-전평 조직체계의 불완전한 작동으로 나타남.
-16개의 산별노조체계 중에서 철도산업부문만이 24일 거의 대부분에 철도총파업에 들어갔음(그러나, 충북 제천은 25일, 경춘철도는 27일에 철도총파업에 참여)
-11개의 지방평의회체제 중에서 대구지평만이 지역적 수준에서 총파업에 들어갔음.
-즉, 산업별로 지역별로 다같이 총파업에 돌입하지 못하였음.

⑤ 산업부문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한 분열
-철도, 운수, 전기, 통신 같은 네트워크 산업과 그렇지 않은 제조업 간의 차이.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규모의 차이.
-철도, 전기, 통신 같은 공공부문과 사적기업 간의 차이.

⑥ 역사적 요인
-일제하 노동운동 경험이 많은 산업부문과 그렇지 못한 산업부문의 차이.
-8.15이후부터 9월총파업이 일어나기까지의 노동운동 경험(자주관리운동, 관리인반대운동, 쌀 획득운동 등)이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차이.

⑦ 노동운동가(당세포)가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차이

⑧ 노동자계급의 총파업과 공장과 회사 밖의 지역사회와 공동체 차원의 인민항쟁과 그리고 농민항쟁 등과의 연합 실패
-대체적으로 노동자계급이 총파업의 하강국면 또는 진압되면서 지역사회와 공동체 차원의 인민항쟁과 그리고 농민항쟁이 일어났음.

0 9월총파업의 목적 애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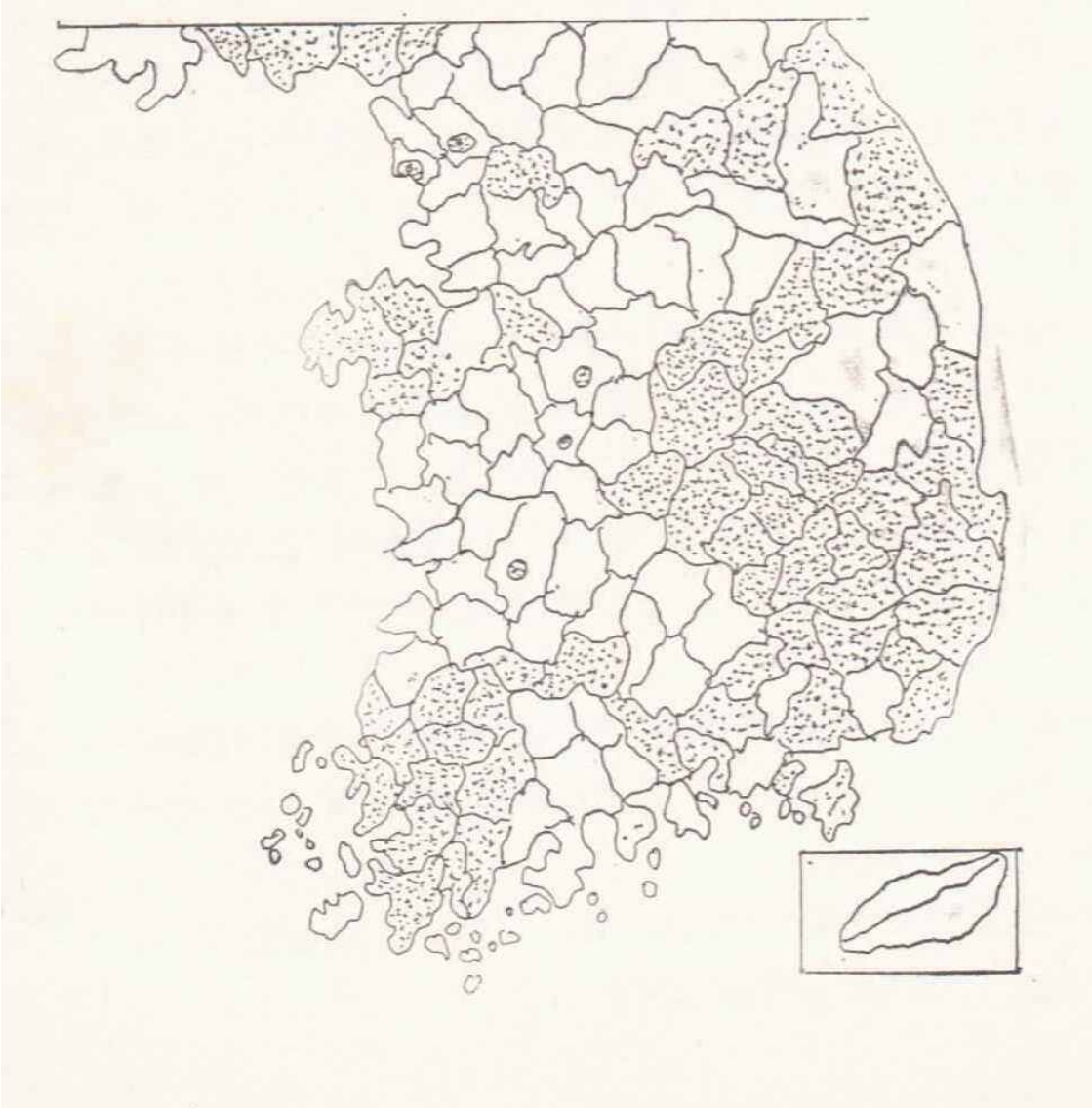
-9월총파업의 목적이 인민정권 획득을 위한 투쟁인지?
-미소공위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압력투쟁인지?
*물론 양 투쟁은 서로 관련, 그러나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 등의 차이 있음.

=>요컨대,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9월총파업은 노동자들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여 미군정을 이길만한 힘을 가지지 못했고, 따라서 미군정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였음.

*1946년 2월, 38선 이남의 전평 조합원 315,100명, 7월 무렵 전평 산하 분회 735개, 9월총파업에서 파업건수 472건은 전체 분회의 64%, 173,404명(연인원이 아님)의 파업참가 수는 전체 조합원의 55%를 차지함.

1946년 10월인민항쟁

10월인민항쟁 발생 지역(진한 색)



도별 항쟁 발생 군과 미발생 군

도별	발생 군 이름(수)	미발생 군 이름(수)	**발생 군수 : 미발생 군 수**	
경북	달성, 고령, 성주, 칠곡, 군위, 의성, 선산, 김천, 영천, 경산, 청도, 경주, 영일, 영덕, 예천, 상주, 문경, 영주, 봉화(19)	안동, 영양, 청송(3)	19 : 3	대구에서 항쟁 발생
경남	울산, 밀양, 창녕, 의령, 진양, 하동, 사천, 창원, 양산, 동래, 통영(11)	거창, 함양, 합천, 산청, 함안, 김해, 고성, 남해(8)	11 : 8	부산, 마산, 진주에서 항쟁 발생
충남	서산, 당진, 예산, 홍성, 천안(5)	아산, 연기, 공주, 청양, 보령, 부여, 서천, 논산, 대덕(9)	5 : 9	대전에서 항쟁 발생
충북	영동(1)	단양, 제천, 충주, 음성, 진천, 괴산, 청원, 보은, 옥천(9)	1 : 9	청주에서 항쟁 발생
경기	광주(1)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강화, 부천, 고양, 양주, 가평, 양평, 시흥, 수원, 용인, 평택, 안성, 이천, 여주(17)	1 : 17	서울(10,3), 인천에서 항쟁 발생
황해	벽성, 연백, 개풍, 장단(4)		4 : 0	38선 이남 의 군에서 항쟁 발생
강원	횡성, 평창, 강릉, 삼척(4)	춘성, 홍천, 인제, 양양, 원주, 영월, 정선, 울진(8)	4 : 8	
전남	영광, 장성, 담양, 광산, 함평, 무안, 나주, 화순, 영암, 해남, 강진, 장흥, 보성(13)	곡성, 구례, 순천, 광양, 여수, 고흥, 완도, 진도(8)	13 : 8	광주, 목포에서 항쟁 발생
전북	순창, 남원(2)	옥구, 익산, 완주, 금산, 무주, 진안, 김제, 무안, 고창, 정읍, 임실, 장수(12)	2 : 12	전주에서 항쟁 발생
계	60	74	60 : 74	

도별 항쟁 참가수(9월 23일~11월 11일)

도별	군	파업투쟁	군중투쟁	계	인구(1946.8)	계/인구(%)
경기	인천	22,000	27,800	49,800		
	광주		12,000	12,000		
	강화		13,000	13,000		
	수원	5,800	15,000	20,800		
	기타4	7,000	56,000	63,000		
	계	**34,800**	**123,800**	**158,600**	**2,486,369**	**6.4**
충북	제천	1,500	12,000	13,500		
	충주		15,000	15,000		
	기타	300	10,000	10,300		
	계	**1,800**	**37,000**	**38,800**	**1,112,894**	**3.5**
충남	홍성		38,000	38,000		
	예산		30,000	30,000		
	당진		33,000	33,000		
	기타5	8,000	45,000	53,000		
	계	**8,000**	**146,000**	**154,000**	**1,909,405**	**8.1**
강원	횡성		18,000	18,000		
	묵호		20,000	20,000		
	기타3	3,000	28,000	31,000		
	계	**3,000**	**66,000**	**69,000**	**1,116,836**	**6.2**
경북	대구,달성	30,000	280,000	310,000		
	상주	2,000	20,000	22,000		
	의성		110,000	110,000		
	군위		50,000	50,000		
	영천	1,200	60,000	61,000		
	기타14	20,000	200,000	220,000		
	계	**53,200**	**720,000**	**773,000**	**3,178,750**	**24.3**
경남	부산	55,000	59,000	114,000		
	통영	1,200	80,000	81,000		
	마산	6,000	58,000	64,000		
	의령		80,000	80,000		
	동래	1,800	38,000	40,000		
	기타13	9,000	220,000	229,000		
	계	**73,000**	**535,900**	**608,000**	**3,185,832**	**19.1**
전북	이리	3,000		3,000		
	기타		1,200	1,200		
	계	**3,000**	**1,200**	**4,200**	**2,016,428**	**0.2**
전남	광주	4,000	25,000	29,000		
	목포	4,500	20,000	24,500		
	나주		39,000	39,000		
	함평		75,000	75,000		
	화순	2,000	5,000	7,000		
	장성		65,000	65,000		
	기타6	12,000	110,000	122,000		
	계	**22,000**	**339,000**	**361,500**	**2,944,842**	**12.3**
서울		**65,174**	**46,064**	**111,238**	**1,141,766**	**9.7**
총계		**264,474**	**2,014,964**	**2,279,438**	**19,369,270**	**11.8**

1. 10월인민항쟁의 배경

① 10월인민항쟁 직전의 일반적 상황
-'해방 상황'은 일제 잔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변혁적 지향과, 일제하에서부터 지속되는 특권을 고수하고 자신에 유리한 사회적.정치적 구조를 형성시키려는 보수적 또는 반동적 지향이 상충.갈등하고 있는 공간이었음.
-이러한 갈등은 새로이 수립되는 국가의 형태, 친일파 처벌, 적산과 노동운동, 토지개혁 등을 둘러싸고 전개되었으며, 게다가 식량문제는 실제 민중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미군정의 정책문제로서 등장하였음.
-이러한 변혁적 요구가 '해방' 이후 1년이 지나면서 점차 거부되고 오히려 탄압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음.

② 10월인민항쟁의 배경(역사적 요인, 사회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
-역사적 요인 : 일제하의 각 지역에서 민족해방투쟁에 종사하였던 다수의 인물들이 '해방' 직후에 '좌익'의 지도자로 등장하였거나, 그 투쟁의 맥락이 지역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음. 일제하 학생운동 참여자들, 적색농조 참여자들, 적색노조 참여자들, 신간회 참여자들 등.

-사회경제적인 상황 : '해방' 직후 경북 경남 등으로 귀환한 이재민과 게다가 산업의 가동중지로 야기된 실업자의 홍수는 경북 경남 등의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켰음.
호열자까지 발생하여 특히 경북은 가장 많은 발생자와 사망자를 낳았음.
토지개혁도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작료 3.1제도 완전하게 지켜지지 않았고, 일인소유의 토지와 과원마저 귀환농민에게 주어지지 않고 신한공사와 모리배의 손아귀에 들어갔음.
적산도 미군정청에 귀속되어 그 운영에 모리배들이 다수 참여하였고, 일인 소유 가옥은 귀환이재민에게 주어지지 않아 집도 토지도 없는 일부 귀환동포들은 다시 발길을 돌렸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량문제였음.
농민에게 추곡과 하곡을 강제적으로 공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쌀소동이 계속 이어졌고 경북의 경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서는 아사자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식량정책으로 많은 지주와 특히 미곡모리상인 등은 많은 이익을 취했음.

-정치적 상황 : '좌익'세력, 노동운동세력, 학생운동 세력, 농민운동세력의 활동 전개. 특히 미군정의 좌익 분열 공작과 탄압. '좌익'세력의 노선갈등(여운형 등의 '좌우합작파', 박헌영 등의 '신전술파')과 조공 내의 분파투쟁('간부파'와 '대회파') 등이 생김.

2. 도별 항쟁 전개 시기

① 경북 : 10월 1일~6일(10월 2일 오후 7시 대구 계엄령 발포 후 3일부터 대구인근 지역으로 파급, 10월 6일 경북 계엄령 발포)
② 경남 : 10월 7일~14일
③ 충남 : 10월 17일~19일
④ 충북 : 10월 4일(영동 : 경북항쟁의 여파). 10월 7일(청주 : 경북항쟁의 여파)
⑤ 경기 및 황해 : 10월 20일~22일

⑥ 휴식기 : 10월 23일~28일
⑦ 강원도 : 10월 29일~11월 첫주
⑧ 전남 : 전기 10월 29일~11월 4일
휴식기 11월 4일~7일(*11월 7일~소련의 혁명기념일)
후기 11월 7일 이후
⑨ 전북 : 12월 중순(전주)

-이렇게 도별 인민항쟁 전개 시기를 보면 마치 '릴레이식' 항쟁방식인 것처럼 보임.
-즉, 경북항쟁이 진압당하면 경남으로, 경남항쟁이 진압당하면, 약간의 휴식기를 지나서 충남으로, 충남항쟁이 진압당하면 경기로… 이어 받는 것처럼 보임. 이러한 '릴레이식' 항쟁방식으로는 중앙집권적 국가인 미군정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결집된 강한 힘을 가지는 것은 어렵다고 봄.
-그렇다면 그러한 항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음.
-하나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요구와 주장을 표명하면 미군정이 그 요구와 주장을 받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행위임.
-그러나, 미군정은 인민의 요구와 주장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안 맞아서 안 받아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구와 주장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요구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음.
-이것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시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박탈하는 파쇼적 행위라고 볼 수 있음.

3. 도별 항쟁의 모습

① 경북 : 대구로부터의 항쟁의 파급
② 경남 : 분산적이고 고립적 형태의 항쟁
③ 충남 : 서북부의 지역적 항쟁
④ 충북 : 경북항쟁의 여파
⑤ 경기 및 황해 : 특히 북부는 조직적인 소규모 항쟁의 게릴라적 모습
⑥ 강원도 : 해안선 일대의 지역적 항쟁
⑦ 전남 : 대규모적이고 어느 정도 체계성이 보였으나 미군과 경찰의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응
⑧ 전북 : 비의도적 항쟁

-이러한 지역별로 다양한 항쟁 모습은 그 지역의 특수한 조건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적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도력의 부재 때문인지.

4. 항쟁의 조직자들

-각 지방인민위원회와 그 산하 단체들(노조, 농조, 청년단체, 부녀단체 등)

5. 항쟁의 성격

-경북항쟁 참여자들의 요구, 주장, 행동을 단순화 시키면 다음과 같음

성격분류	*친일파반대	*미군정반대	*인위에 의한 치안행정	식량 및 생활난	*민주주의	북한의 영향
빈도수	25	33	24	9	3	1

*친일파 반대 : 경찰에 관련된 문제 15건, 군행정에 관련된 문제(행정관서의 파업, 인위에 의한 행정 등) 5건, '애국자'(좌익) 석방 '반역자' 비난 5건.
*미군정 반대 : 과도입법기관 설치반대와 도청에 관리들에 관한 것 4건, 경찰에 관련된 문제 15건, 군행정에 관련된 문제(행정관서의 파업, 인위에 의한 행정 등) 5건, 식량 및 생활난 9건.
*인위에 의한 치안 행정 : 경찰에 관련된 문제 15건, 군행정에 관련된 문제(행정관서의 파업, 인위에 의한 행정 등) 5건, 과도입법기관 설치반대와 도청에 관리들에 관한 것 4건
*민주주의 : 민주주의 및 민주적 조치에 관련된 문제 3건.

경북항쟁 참여자들의 요구, 주장, 행동

군 이름	공격대상 건물, 물건	공격대상 인물	요구, 주장, 행동
대구,달성군	경찰서	경찰	0식량배급(부녀자들의 요구) 0시민에 대한 발포 금지, 경찰의 무장해제, 애국자 석방(학생들의 요구). 0파업단의 합법성 인정, 검속자 석방, 탄압중지(학생단과 미군과의 타협). 0도청 제간부들의 사직, 행정권의 조선인에게로의 이양, 일반봉급자의 생활확보(도청직원의 요구).
고령군	경찰서 지서 군청공격 모의	경찰	0식량배급(1인당 4합), 추곡수집시 가혹행위 중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비민주주의적인 관공리의 반성 사직, 애국자의 석방(군중의 요구).
성주군	경찰서 서장 사택 지서장 사택 도구문 사택	경찰	0경찰의 파업, 무기가용금지, 무기고 열쇠 이양(군중의 요구). 0과도입법위원 반대, 미국의 식민지화 반대, 양곡공출의 잔인성 비난(10월 항쟁 1주일 전). 0경찰에 대한 생화장 기도.
칠곡군	경찰서 지서	경찰 관공리	0경찰들을 결박한 후 흉기로 살해.

	서장 사택 교량 파괴	부자	
군위군	경찰서 지서 군청 경찰서장 및 군수의 사택	경찰서장 군수	0군청을 인민위원회에 넘길 것(군중들의 요구).
의성군	경찰서 지서 군청 면사무소	경찰서장 군수	0경찰의 파업, 경찰의 사직, 이찬을 민청에 넘길 것(경찰에 대한 군중의 요구). 0군청의 파업, 다음에 유임하지 말 것(군수에 대한 군중의 요구). 0새로운 8.15를 맞이하자(시민대회)
선산군	경찰서 지서 면사무소 군수 면장 면직원 우익인사 소방대장 군 고문 등의 가산 파괴 하곡수집소(낙성동)	경찰 우익인사	0인민위원회 설치, 인민위원회보안서 설치와 인사배치 0면 저장식량 접수 0살반출 항의 0하곡분배(낙성동) 0암살명부 작성
김천군	경찰서		0경찰의 파업, 경찰서의 인계
영천군	우편국 경찰서 지서 군청 면사무소 재판소 등기소 신한공사 출장소 부호 가택과 가산 기독교 교회 소학교	군수 관공리 경찰 지주 우익인사 전도사	0“38선이 철폐되었고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동지들이 남조선에 들어왔다. 굶주린 동포를 위해 일어나라”(항쟁 중의 한 구호).
경산군	경찰서 지서		0경찰의 무장해제, 경찰서의 인계(군중의 요구)
청도군	경찰서		
경주군	경찰서 군청 지서 면장 사택		0이 기회를 이용하여 뿌리를 깊이 박을 것. 0인민들은 폭력에 빠지지 말 것.
영일군	지서 면사무소 금융조합 관공리 사택	우익인사 군수 전도사	0민주주의 건설, 굶주리고 울부짖는 인민을 구할 것, 반역자의 나라 거부(포항 시위대가 군정관리에 제출한 서신 내용).

	지서장 사택		
영덕군	면사무소 지서 우익인사 사택과 가재	면장 관공리 우익간부	
예천군	경찰서 지서 서장 사택	경찰 우익인사	0감금된 민청원의 석방을 요구
상주군		반동분자 테러단 경찰	
영주군	지서 지서장과 면장 사택 교회당 우익인사 사택		
문경군	지서		

① 참여성의 측면 : 일부 사람을 제외한 전민중적 성격을 지녔음. 노동자들(취업노동자, 실업노동자, 예비노동자=학생, 가사노동자='부녀', 도시빈민=불안정 노동자 등)과 농민들 등.

② 조직성의 측면 : 경북도 수준에서 볼 때, 10월인민항쟁은 10월 2일 대구경찰서 접수와 오후 7시계엄령 발포 이후부터는 '좌익' 지도부(전평, 조공, 인민당 등)의 '통제'를 넘어 파급되었음.
군 수준에서 볼 때에는 군에 따라서 조직성의 차이가 다양하였음.
항쟁단위 또는 조직단위는 군 또는 일 지역.

③ 구체적인 요구, 주장, 행동의 측면 : 친일파에 대한 원한, 미군정 정책의 반동화 정책에 대한 저항, 인위에 의한 행정과 치안 담당 요구, 식량 및 생활난에 대한 반발 등의 요구, 주장, 행동이 한꺼번에 표출되었음.

-> 요컨대, "10월인민항쟁은 일제하에서 민중을 괴롭힌 자들이 미군정의 후원에 의해서 현재에도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계속 민중을 괴롭히는 상황과 미군정의 정책 실패로 인한 생활난(특히 식량문제와 하곡수집, 인플레)에 저항하여, 민중이 그들을 징벌하고 인민위원회 중심으로 새로운 행정과 치안을 수립하려 했던 항쟁의 성격"을 보여주었음.

=>중앙집권에 대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통한 권력의 평등한 분배 추구.
=>부의 집중(가령, 지주와 모리배와 대자본의 식량 집적 등)에 대한 평등한 분배 추구.
=>대리·위임민주주의에 대한 직접행동 민주주의 추구.
=>반권력·반권위·반국가 추구 등.

6. 10월인민항쟁의 의의

① 역사구조적인 차원에서 볼 때 10월인민항쟁은 일제하에서 구조화된 사회구조와 정치구조가 해방과 더불어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 또는 재건되는데 대한 항쟁.
② 10월인민항쟁은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기존의 지배구조를 유지시키고 변혁적 지향을 거부했던 미군정에 대한 저항.
③ 미군정의 후원을 받고 기존의 지배구조를 유지시키려 했던 보수적 또는 반동적 세력에 대한 저항.
④ 구체적으로 민중들의 삶을 어렵게 한 식량정책 및 생활난에 대한 반발.
-> 위의 ①②③④는 요컨대, 10월인민항쟁이 '미군정의 반동화정책 및 식량정책'에 대한 저항임.
⑤ 운동사적으로 볼 때 10월인민항쟁은 일제하에서부터 이어지는 민족해방투쟁적 맥락과 사회변혁운동의 맥락 속에 위치함.

7. 10월인민항쟁의 결과 : 9월총파업의 결과

-변혁지향적 조직역량의 손실
-조직역량이 담지한 변혁지향의 이데올로기적 역량 손실
-변혁지향적 운동의 부정적 전환점이 됨
=>바꿔 말하면, 미군정(미군정의 대리세력이 되는 친일친미세력, '우익' 세력, 자본제 지향세력)을 위협하는 세력의 총체적 약화. 미군정의 38선 이남 지역에 지배력 강화.

8. 10월인민항쟁의 패배 원인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세력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하여 싸울 때 그 결과는 그 세력의 힘의 강약에 좌우됨.**
-그 힘의 강약은 정세(상황)인식과 대응방안에 달려 있음.
-정세인식의 핵심은 싸울 상대가 누구인지와 그 전략전술을 아는 것이고, 대응방안(전략전술, 목적과 수단)은 그 상대와 싸워야 할 우리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인가를 말함.

* 정세인식과 대응방안
-미군정은 정확하게 자기의 적을 인식하고 대응하였음(38선 이남을 점령지로 파악, 인공부인, 적산 접수, 미소공위 사업 저지, '좌익' 분열공작과 '좌익' 탄압 등).
-그러나 변혁지향적 세력은 그러하지 못하였음(미군을 '해방군', 미국을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 '반파쇼 민주주의 연합국' 등으로 봄) : 미군정을 싸워야 할 상대로 인식하고 최대한 광범위한 반미제·반자본 통일전선 구축 여부 등.
-결국은 미군정을 싸워야 할 상대로 인식하게 되었지만, 최대한 광범위한 반미제·반자본 통일전선을 형성하지 못하였음(이 통일전선의 중심인 '좌익전선'과 그 핵심인 조공이 분열되었음).
*인민항쟁?

-인민항쟁이란 노동자들의 파업과 '비노동자'세력들의 투쟁이 결합한 것을 의미하며, '비노동자'세력들의 투쟁에는 도시항쟁과 농민항쟁 등이 포함되는 것임.
-즉, 인민항쟁이란 노동자들의 총파업 도시항쟁 농민항쟁 등의 연합항쟁 등을 말함.
->따라서 인민항쟁이 성공하기 위한 힘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노동자계급 통일전선=노동자계급의 단결 연대와 나아가 최대한의 광범위한 도시항쟁과 농민항쟁 등의 연합이 필요한 것.

0 인민들의 분열

① 노동자계급의 총파업과 농민항쟁 등 인민들과의 결합 실패
-대체적으로 노동자계급이 총파업의 하강국면 또는 진압되면서 공장과 회사 밖의 지역사회와 공동체 차원의 인민항쟁 그리고 농민항쟁이 일어났음.

② 인민들의 이념지형과 실천행동의 괴리(1946년 8월 미군정의 38선 이남 전역의 여론조사를 보면, 사회주의 지향이 약 70%, 공산주의 지향이 약 7%였으나, 위에서 봤듯이 38선 이남 지역 134개 군 중에서 60개(47.8%) 군은 인민항쟁에 참여했으나, 74개(52.2%) 군은 참여하지 않았음).
-이는 인민항쟁세력의 38선 이남 지역의 '총역량'의 정도를 나타냄.

③ 변혁지향세력의 지역별 불균등 존재 : 지역별간 분열의 가능성
-항쟁세력의 지역별 참여율의 불균등(경상도는 41개 중에서 30개 군 참여, 전라도는 35개 군 중에서 15개 군 참여, 충청도 24개 군 중에서 6개 군 참여, 강원도 12개 군 중에서 4개 군 참여, 경기도 18개 군 중에서 1개 군 참여, 황해도 4개 군 중에서 4개 군 참여).

④ 인민들의 이데올로기적 분열
-인민항쟁에 참여한 인민들과 참여하지 않는 인민들의 이데올로기적 분열 가능성(변혁지향적 인민들, 미군정 지지 인민들, 기회주의적 인민들).
-인민항쟁에 참여한 인민들의 이데올로기적 분열 가능성(중앙집권적 권위 지향적 인민들, 지방분권적 지방자치 지향적 인민들, 반권력 반국가 지향적 인민들, 위임·대리민주주의 지향적 인민들, 직접행동민주주의 지향적 인민들 등).

⑤ 이데올로기적 '좌익' 세력의 분열과 약화(미군정의 '좌우합작' 정책에 여운형 노선이 포섭됨으로써 '좌익' 전체의 힘 약화, 조공의 '분파투쟁' 등으로 조공 전체의 힘 약화)로 인민항쟁세력과의 연합력 취약.
-10월 1일 지역적 차원의 대구인민항쟁이 10월 2일 대구경찰서 접수와 미군정의 계엄령 발포를 거쳐 대구 인근지역 항쟁 등으로 파급되었지만, 경북항쟁 등 10월 인민항쟁은 군 인민위원회나 인민 스스로에 의하여 전개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음.

⑥ 인민항쟁의 비조직적, 지역별적, 비동시적, 분산적, 각개적인 발생과 전개
-이것은 안 그래도 취약한 인민항쟁의 '총역량'조차 갈가리 찢어놓는 것이었음.
-그리고 미군정의 중앙집권적 강제 조직의 체계적 진압을 아주 쉽게 하였음.

-지방분권제와 지방자치제 지향이 그 자체로는 권력 평등과 직접행동 민주주의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치적 가치를 가지지만, 광범위하고 튼튼한 **지방자치제 지향세력들 간의 평등한 연합 네트워크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고립 분산된 상태에서는 중앙집권 세력의 탄압에 무력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
-예컨대, 경북항쟁 때 미군정은 경북 자체의 억압기구로 진압하기가 어렵게 되자 아직 항쟁이 일어나지 않는 충남이나 경기, 일어나도 미약했던 충북의 경찰이 지원되었고, 게다가 충남과 충북의 미군도 원조했고, 김두한이 이끄는 '우익'청년단 3,000명도 진압하러 왔고, 수도경찰의 교관이 이끄는 파업파괴자, 충남의 국방경비대도 투입되었음.
-만약 충남, 경기, 충북, 서울, 경북 등 간에 **지방자치제 지향세력의 연합 네크워크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어서** 동시에 경북항쟁만큼의 항쟁이 일어났다면 충남, 경기, 충북, 서울의 경찰이나 군대 등이 경북항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파견될 수 있는 여력은 없었을 것임.

⑦ 미군정(친일친미파, '우익', 부르주아지 등의 미국 대리세력)의 사회경제적, 정치군사적 요새인 서울을 인민항쟁으로 '균열'을 내지 않고는 인민항쟁이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하였음. 물론, 서울에서도 10월 3일 수천 명의 **미약한 인민항쟁이** 발생하였지만, 곧바로 MP·CIC, 무장경관 등에 의해 진압되었음.

*이후의 역사이지만, 1960년 '4.19 혁명'이 다른 곳과 더불어 서울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승리'했고, 1987년 '6월항쟁'도 다른 곳과 함께 서울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승리'했음. 1979년 8월 YH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항쟁 등과 10월부마항쟁 등, 즉 서울과 부산과 마산 인민항쟁 등의 '협공'으로 '유신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 그러나 서울이 '균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1948년 '4.3제주민중항쟁'과 '10월여순항쟁',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은 조만간에 진압되게 되었음.

0 10월인민항쟁의 목적 애매?

-10월인민항쟁의 목적이 인민정권 획득을 위한 투쟁인지?
-미소공위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압력투쟁인지?
*물론 양 투쟁은 서로 관련, 그러나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 등의 차이 있음.

=>요컨대,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10월인민항쟁은 인민들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여 미군정을 이길만한 힘을 가지지 못하였고, 따라서 미군정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음.

*근대 이후, 3대 인민항쟁(박헌영) : 동학농민전쟁(1894), 3.1운동(제1차세계대전 뒤, 1919), 9월총파업을 포함한 10월인민항쟁(제2차세계대전 뒤, 1946).
-앞의 두 항쟁(동학농민전쟁, 3.1운동)은 당시에는 패배했지만, 결국에는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났고 그들이 지향한 자본주의체제가 실현됐다는 점에서 성공한 민중항쟁이기도 함.
-그러나, 10월인민항쟁의 패배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

[나가는 말] :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는 어떠할까?

***엥겔스의 파업투쟁관**

엥겔스는 대부분의 파업투쟁이 노동자들 쪽에 불리하게 끝남에도 불구하고 파업투쟁을 감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음.

"그 대답은 간단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임금삭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삭감의 필연성에 대해서까지도 저항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들은, 인간으로서 그들 자신이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황이 그들에게, 즉 인간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선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는 침묵은, 부르주아지가 노동력 수급사정이 좋은 시기에는 노동자들을 수탈하고 나쁜 시기에는 그들을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둘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그들이 모든 인간적 감정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닌 한, 이러한 사태에 맞서 저항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가 아니라 파업으로 저항하는 까닭은 그들이 … 즉 실천적인 인간이기 때문이다."(엥겔스)

***전평과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이'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지배와 통제,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었던 피지배계급의 관점에서는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첫째, 총파업과 인민항쟁은 38선 이남지역에 대한 미국의 점령과 지배 정책의 본질이 노동자와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계급적 지배체제의 유지와 강화에 있었음을 내외적으로 폭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

둘째, 38선 이남지역의 노동자와 민중은 자본과 자본주의국가의 억압과 착취체제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저항정신과 투쟁의지를 과시하고 억압과 착취체제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했다는 것.

셋째, 노동자와 민중은 총파업과 인민항쟁 과정에서 노동력의 상품화를 거부하거나 공장과 사업장을 점거하고, 봉건적 지주들과 국가 권력기관을 공격하고 파괴했다는 것.
즉 지주적·자본주의적 소유권을 부정하여 새로운 사회경제질서로 일시적으로나마 대체해버린 경험을 하거나 새로운 국가 권력관계의 수립을 원망(願望)했다는 것.

넷째, 38선 이남지역에서 노동자와 민중의 부르주아지와 자본주의국가에 대한 계급투쟁은 38선 이북지역의 '민주개혁'의 안정적인 실시와 그 정당성을 방위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38선 이남지역 뿐만 아니라 38선 이북지역까지도 몽땅 차지

하려는 자본과 미국의 지배정책을 좌절시켰다는 것.

다섯째, 미군정이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을 전쟁으로 인식하고 대처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자와 민중의 단결된 계급투쟁의 위력은 엄청나다는 역사적 경험을 후세의 노동자와 민중에게 남겨 주었다는 것.
이러한 노동자와 민중의 단결된 계급투쟁은 조공(남로당)과 전평의 존재와 역할이 필수적인 전제임을 말해 주었다는 것.

▣ 참고문헌

0 브루스 커밍스 지음/김주환 옮김,『한국전쟁의 기원』, 청사, 1986.
0 정해구,『10월 인민항쟁연구』, 열음사, 1987.
0 김기원,『미군정기 경제구조』, 푸른산, 1990.
0 민중운동사연구회,『해방후 한국 변혁운동사』, 녹진, 1990.
0 한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한국현대사 1』, 풀빛, 1991.
0 안진,『미군정기 억압기구 연구』, 새길, 1996.
0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엮음,『제국주의와 한국사회』, 한울, 2002.
0 역사학연구소 엮음,『역사 속의 미래, 공산주의』, 현장에서미래를, 2004.
0 역사학연구소 지음,『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서해문집, 2004.
0 역사학연구소 지음, 『노동자, 자기역사를 말하다』, 서해문집, 2005.
0 안태정,『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현장에서미래를, 2005.
0 김무용,「해방 직후 노동자공장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성격」,『역사연구』3, 1994.
0 조돈문, 『노동계급의 계급형성』, 한울아카데미, 2004.
0 김무용,「해방후 9월 총파업의 지역별 전개와 성격」,『역사연구』8, 2000.